

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

2016. 6. 16.

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
한 국 은 행 금융감독원

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목 차

I.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필요성	1
II. 제도 개편방향	2
1. 선물환포지션 제도	
2. 외환건전성 부담금	
3. 외화 LCR 규제 도입	
III. 향후 추진계획	4

I.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필요성

- ◇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선제적 개편 필요성 대두
- 외환건전성 제도는 시스템 리스크 억제에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개별기관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화유동성 규제로 구분
 -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거시건전성 조치는 美 확장적 통화정책, 조선업 호황 등에 따른 자금유입 압력이 강했던 상황에서, 단기외채 급증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
 - 외화유동성 규제는 은행들의 외화자산/부채의 만기불일치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
- 그러나, 美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외화자금 흐름의 일방적 유입 상황 약화
 - * 외국인증권투자(주식+채권, 조원) ('15.11~12월) △5.1 ('16.1~2월) △8.2 ('16.3~5월) 8.4
 - 향후 Brexit 국민투표, 美 대선 및 금리인상 등 정치·경제적 리스크로 인해 자금 유출압력이 증대될 가능성
- 또한, 현행 외화 유동성 규제체계도 평상시 지표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운 위기시 대응에는 한계
 - '08년 금융위기사, 모든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규제를 충족*했으나 차환을 급락, 실물 외화공급 감소 등 유동성 부족**을 경험
 - *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비율(평균, 85%규제): ('07말)102.7% → ('08말)98.8%
 - ** 국내은행 외화차입 차환율: ('08.1월) 126.4% → ('08.10월) 39.9
 - 위기 이후 안전자산보유비율 등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실효성 미흡
 - * 은행 안전자산보유비율은 628.6%('15말)로 규제비율(100%)을 크게 상회
- 따라서,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기존의 외환 거시건전성 조치를 변화한 시장상황에 맞도록 변경하고,
 - 외화유동성 규제는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

II. 제도 개편방향

1 선물환포지션 제도

- ◇ 선물환포지션* 한도를 확대하여 대외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

* 은행의 선물환포지션=(선물외화자산 - 선물외화부채) / 전월말 자기자본에 上限을 설정

- 현행 선물환포지션 제도 한도를 소폭 상향 조정

- 국내은행은 30%→40%로, 외은지점은 150%→200%로 조정

<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추이 >

	제도도입('10.10)	1차 조정('11.7)	2차 조정('13.1)	3차 조정('16년上)
국내은행	50.0%	40.0%	30.0%	40.0%
외은지점	250.0%	200.0%	150.0%	200.0%

- 은행들의 포지션 여유가 충분한 만큼, 제도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선물환거래 확대, 단기외채 급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

* 국내은행 5.8%, 외은지점 58.6% ('16.4월말)

2 외환건전성 부담금

- ◇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, 탄력적 요율조정의 법적 근거 마련

- '15년 대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1차 정비*한 바, 개편효과를 당분간 지켜볼 계획

* (요율) 계약만기 (1년이하 20, 1-3년 10, 3-5년 5, 5년초과 2bp)→잔존만기 (1년 이하10bp)
(대상) 은행 → 은행 + 증권·보험·여전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

- 다만, 급격한 자금유출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, 일시적으로 요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(외국환거래법 개정)

3 외화 LCR 규제도입

◇ 외화 LCR을 '17년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하고 자율적 관리 가능 규제, 중복·불필요한 규제 등은 폐지

* Liquidity Coverage Ratio(高유동 외화자산/항후 1개월간 외화순유출)
: 바젤III 권고사항으로,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상황 측정

□ 모니터링 지표인 외화 LCR을 '17년부터 모든 은행에 규제로 적용하되, 외은지점, 수은,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은행* 등은 적용 면제**

* 외화부채 비중이 5%미만이고, 외화부채 규모가 5억불 미만인 은행

** 외화 LCR 면제대상 은행은 현행과 같이 만기불일치 규제 유지

○ (규제비율) 현행 모니터링 비율, 은행별 특수성 등에 따라 규제 비율을 차등적으로 도입하고 '19년까지 점진적으로 규제비율 상향

* 일반은행: ('17년) 60% → ('19년) 80% (매년 10%p 상향)
특수은행 (기은, 농협, 수협): ('17년) 40% → ('19년) 80% (매년 20%p 상향)
산업은행: ('17년) 40% → ('19년) 60% (매년 10%p 상향)

○ (규제방법) 매월 평균적으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

* 일별 순현금 유출규모(분모), 고유동성 자산(분자)규모를 각각 합산하여 산출

○ (규제비율 완화) 위기시 외화 LCR 규제준수를 위해 실물부문 외화 공급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비율 완화근거 마련

□ 자율적으로 관리가능한 규제, 실효성이 낮은 규제, 외화 LCR과 중복되는 규제 등을 폐지하여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부담 완화

개편 前		개편 後	
7일	만기불일치 비율	7일	폐지, 은행 자율적 관리
1개월	만기불일치 비율	1개월	외화 LCR 규제 도입 * 중요통화 LCR 모니터링
3개월	외화유동성 비율(3개월)		
-	외화 여유자금 비율		
1년초과	외화 안전자산보유 비율	1년초과	중장기 외화자금 비율

III. 향후 추진계획

□ (선물환포지션 제도) '16.7.1일부터 시행 (외국환거래규정을 통첩 방식으로 즉시 개정)

□ (외환건전성부담금) 탄력적 요율조정의 법적 근거 마련 ('16.6.14일 외국환거래법 개정 입법예고)

□ (외화 LCR) '17.1월부터 시행 (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)

○ '16.6월중, 은행, 협회 등과 금번 규제개편 관련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